

“1당은 우리 것” 민주·통합, 불꽃 선거전

민주당 '코로나 일꾼론' 통합당 '정권 심판론' 지도부, 전국 지원 유세 민생당·정의당 '견제론'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총 300명의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53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구 맞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정당의 표심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양당이 지역구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일 정가에 따르면 이혜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6일), 광주(8일), 대전(10일) 등 전국을 돌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수도권 자원에 주력해 온 통합당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남 부산·경남(PK)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대전·세종·경주 지역을 찾은 등 활동 반경을 넓히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총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지만, 총선이 임박하면서 각 진영의 지지세력 결집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을 힘을 실어달라는 이른바 '코로나 일꾼론'에 메시지를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심판론'을 거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최상의 선거운동



선거공보물 발송 준비 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4·15 총선 선거공보물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세 등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반영된 결과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미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주두고 있다. 자신이 출마한 서울 종로 선거운동은 물론 취약·접전지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한 몸 선거운동'을 강화한다. 이날부터 양당 후보 1명씩 짝을 지어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 공동 공약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 이상, 비례대표 17석 이상을 확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정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자초한 만큼 총선을 통해 심판, 정책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현 정권의 실책이 가려졌지만, 남은 열흘 동안 이 점을 부각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권 심판이 최상의 코로나19 대응책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종로 선거에 집중하며 '무능 정권 심판'을 주장하고,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경제 심판론'을 설파, 총선판을 뒤흔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관계가 요동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원에 나서는 등 유연한 선거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로서 통합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130석, 비례대표 17석 등 총 147석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이 밖에 호남 기반의 민생당은 민주당 견제 세력인 민생당이 선전해야 호남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전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순박가 삼일선대위원장은 전국을 돌면서 선거 지원을 계속한다.

여권의 비례정당 출현으로 초반에 고전했던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에 올라섰다고 보고 '진짜 진보정당' 선택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투표대중을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정당 투표에서는 제3세력을 찍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광륙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윤영덕 "선거운동,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 전환"

광주 동남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선거운동을방식을 유세 중심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만 전달하려는 노력보다 지역사회



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이 재난 위기상황에서

만 자체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륙 기자 kroh@kwangju.co.kr

장병완, 경제위기 극복 3대원칙 제시

광주 동남갑 후보

민생당 장병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대책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경직된 발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은 예상되는 경제위기 쓰나미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책으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 ▲소상공인 긴급지원

금의 대폭적인 연장 및 공공요금 인하 ▲납부기한 연장 ▲국가기간산업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오광륙 기자 kroh@

윤영일 "농어업 조세감면 연장 최우선 발의"

해남·완도·진도 후보

민생당 윤영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는 5일 "21대 국회에서는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농어업 분야의 주요 조세감면 제도가 연달 종료되면 농어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축협 관련 조세감면 항목은 20년으로 지난해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 7611억원에 달하고, 수산업 분야 역시 12년간 1835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약 2조원 규모"라며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어민과 농·축·수협 등에 2조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었는데, 그런 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

민주당, 박빙 지역구 화력 강화

열린민주당 비례 표식 잠식에 지역구서 보충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열린민주당이 잠식하는 분위기에 대해 '박빙' 지역구에 화력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 비례 17석 등 총 147석을 얻어 1당을 구성하는 게 이번 총선의 목표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비례 표식 잠식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비례 의석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석에서 이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3일 한국갤럽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조사(3월 31~4월 2일·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시민당은 21%였다.

선거까지 남은 12일간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지도부는 물론, 임종석 전 실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접전 지역을 훑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륙 기자 kroh@연합뉴스

동교동계 정대철·권노갑, 민주당 복귀 선언

동교동계 정치 원로인 정대철·권노갑 전 의원 등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선언했다.

5일 정가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지켜보며 민주당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해 오늘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것이 역사의 진전을 돕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김대중 대통령, 정일형 박사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민주당이 계승·발전시켜줬다고 믿는

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복귀는 약 4년 3개월 만이다. 이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 줄곧 몸담아 왔으나, 지난 2016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당이 분화된 민주평화당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9월 신당 추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자 민주평화당을 탈당했다. 이번 회견에서는 정·권 전 의원을 비롯해 김희철·류재희·송성찬·신승훈·신중식·이경재·이영권·정호준·최락도·최재성·홍기훈 등 동교동계 인사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정철희 "함평~광주 도로 확장 나산교까지 연장"

함평군수 후보

무소속 정철희 함평군수 후보는 최근 나산면·대동면을 찾아 지역공약을 발표 했다.

정 후보는 "나산면의 함평-광주간 지방도 825호(용도리-수하리)의 4차선 확장공사를 나산교까지 연장하고, 나산강변에 가족 나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면은 함평읍과 연계하여 농업중심지로 활성화하고 다목적 복합기능의 스포츠타운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 후보는 "이번 선거는 함평의 현안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선가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며 "저는 젊은 시절에는 세마를 지도자로 지역을 바꾸는 일에 앞장섰고 이후 행정공무원으로 함평군청에서 군정을 수행했으면 되지만 후에는 함평군 의회 의원으로 10여년 의정 활동을 해 온 준비된 군수 후보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 입찰전 유의사항

- 당사(코리아신탁)가 진행되는 공매(공매계약)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른 입찰매매에 해당합니다. 본 공고상 매수인인 부당하는 조건을 정하여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당첨 여부)는 공매(계약) 및 관리비(입찰금)와는 관계없이 채납관리비 포함하는 매매매매는 별도로 매수인이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입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 이후 매매 계약 체결 시 당사(코리아신탁) 단독 판정으로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공매공고에 오기 전 또는 공매 당일 또는 매매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이자 및 할증금 반환합니다.
- 입찰의 승낙과 포함에 관한 중요 주의사항 등에는 해당하여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계약은 부당하거나 효력이 없습니다.

연도	소재지	토지면적	건면적	규모
1	전라남도 광양시 태안동 1690	1,945.6	제1층면적 645.27 제2층면적 406.63	자실 3층 지실 단층
합계		1,945.6	1,051.9	

- 주1: 공매계약대상인 부동산의 세세내역은 등기부등본(사학부) 또는 현행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등본상 담보나 전세권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세공 체제에 따른 공매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입찰일 및 최저 입찰가격

회차	입찰일	입찰시간	온라인 개찰일시	최저 입찰가격	입찰 및 개찰 장소
1	2020.04.13	10:00 - 04.13. 16:00	2020.04.14. 11:00	1,200,000,000	(www.onbid.co.kr)
2	2020.04.14	10:00 - 04.14. 16:00	2020.04.16. 11:00	1,080,000,000	
3	2020.04.16	10:00 - 04.16. 16:00	2020.04.17. 11:00	972,000,000	
4	2020.04.17	10:00 - 04.17. 16:00	2020.04.20. 11:00	874,800,000	
5	2020.04.20	10:00 - 04.20. 16:00	2020.04.21. 11:00	787,200,000	
6	2020.04.21	10:00 - 04.21. 16:00	2020.04.22. 11:00	708,368,000	
7	2020.04.22	10:00 - 04.22. 16:00	2020.04.23. 11:00	637,728,000	
8	2020.04.23	10:00 - 04.23. 16:00	2020.04.24. 11:00	573,956,280	

- * 공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은 공매공고 상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본 공매공고에 신탁공매의 사전 동의에 의해 개별 입찰 및 고액 입찰이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입찰의 의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3: Onbid 공매에 특례의 위기 및 일시적 중단이 발생할 경우 입찰을 위하여 다음 차수 공매 실시 전 수의계약이 가능 한 공매(공매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금액, 최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간월가계은 전체 매매계약의 약 53%로 잔금납부시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 주4: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확정되는 사항(특정 업체, 근방 등 제한 물건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 별도 주2: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해운 해운이 지는 조입니다.)

2-1. 매매계약(현재 사건진행 및 미정당시 포함)

구분	채권자명	사건번호	채권자신청인(신청인) 번호	비고
1	채권자명	2019년194943	주1****	
2	채권자명(공익채권)	2019년1950646	가1****	
3	채권자명	2019년1911565	가1****	
4	소유권(채권)등기부등본	2019년1911545	가1****	
5	소유권(채권)등기부등본	2019년1910785	가1****	
6	소유권(채권)등기부등본	2019년1910087	주1****	

* 위 기재내역 이외에도 본 공매 목적 부동산에는 당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권권 등 제한권리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사항

- 가. 공매대상
 - (1) 공매대상: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및 코리아신탁(주) 홈페이지(www.ktrust.co.kr)
 - (2) 공매대상: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및 코리아신탁(주) 홈페이지(www.ktrust.co.kr)
 - (3) 문의 및 취: 코리아신탁(주) ☎(02) 3430 - 2008
 - (4) 공매방법: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선처분 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신청인임을 위한 본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Onbid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 절차(온·오프) 등을 참조하십시오.
 - (5) 대리인인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합니다.
- 나. 낙찰자의 결정
 - (1) 입찰의 성립: 입찰경쟁참조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로 성립된(낙찰대상) 유효합니다.
 - (2) 개찰: 개찰 시 입찰서 및 Onbid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합니다.
 - (3) 낙찰자 결정: 최저 입찰가격 및 이상 입찰서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서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인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서만을 대상으로 Onbid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취소 등 원인: 본 입찰은 당사 사전 방식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에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공매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입찰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및 기타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위 ① 및 ②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5) 부가가치세: 공매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낙찰에서 개찰까지의 비율로 토지와 건물 비공을 계산한 후 건물 비율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한다. 부가가치세는 본 공매공고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6) 단, 공매목적부동산이 공매 전 전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7)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1일 2차수 공매계약 전에서 낙찰자가 되었다면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 실시 후 입찰금입 결제, 전 차수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공매대상은 동일시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개찰일 직전에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 다. 수의계약
 - (1) (유익사항) 공매진행 중(최초 입찰일 ~ 최종 입찰일)에는 각 입찰회 개찰 후 유찰 확정사항 다음 최저 입찰일까지 전 영입 종료시까지 수의계약 신청가능 가능. 단, 최종 최저 입찰의 유효확정시 다. 수의계약(계약)은 입찰금입 결제 후 14일 이내 수의계약 가능
 - (2) 각 차수 공매가 유찰되거나 낙찰 후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차수 입찰 이전까지는 유찰되거나 매매계약 해지된 차수 공매(계약)가 자동으로 아래의 서류를 첨부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보증금: 매수인(신청인)의 100%의 10
 - 2. 입찰서명: 방문접수(유권금 등 기타비용 불가)
 - 3. 접수서명: 신탁
 - (단, 동시 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 접수자 중 최고가 접수자를 수의계약자로 정함)
- 4. 신청서명
 - 가. 매수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 나. 입찰보증금(방문접수 시 현금인계통금) 1부 및 인감증본
 - 다. 주민등록등본(방문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위임장(대리인에 한함) 1부
 - 마.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 바. 수의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1부
 - 사. 기타 수의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 글
 - (당사는 수의계약 신청에 대하여 인터넷 매매계약 체결을 가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당사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4) 본 건물은 최치만 일지가 연속이므로 수의계약은 마지막 8차수 개찰일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참가자 계좌인 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입금 및 환불시 온비드 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10%이상인 입찰보증금의 사용이 제한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가상계좌 발급받은인 신한, KEB하나, BNK, IBK(기타),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에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개찰일 이자 없이 환 불되며, 별도로 송금수수료가 발생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입찰보증금 중 납부한 경우 잔액을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령을 제외한 금액을 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서 또는 낙찰자명칭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조건

- 가. 계약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508, 행정2동 10층 코리아신탁(주)
-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공매공고에 따라 하기로 하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에 당시에 유익금(신탁사)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환액도 유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재무처의 면제 등으로 공매계약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처분 등 다른 원인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포함한 매매계약 전체(부가가치세 포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납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통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시에 유익금(신탁사)으로 귀속됩니다. 라.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공금(신탁사)을 발급수령서(사)로만 교부받아야 합니다.

6. 공매계약조건

- 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세(인도) 및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채세공과금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매계약에 민방금 무담보 투입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유의하시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전자기 명단명칭을 불기능합니다. 다. 소유권은 공매공고의 현상 그대로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의 정하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지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사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주택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 및 상기조건을 임대차보증금 전 물의 인도와 세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해당 다음 위에 당사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대금의 반환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하며,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장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수자는 낙찰금 기입부담 내역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제3자의 의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바. 통신통신에 중재할 수 있는 재판원권, 소송관리사(소송권분쟁 포함), 임